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2025년 3월 10일(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돌봄·의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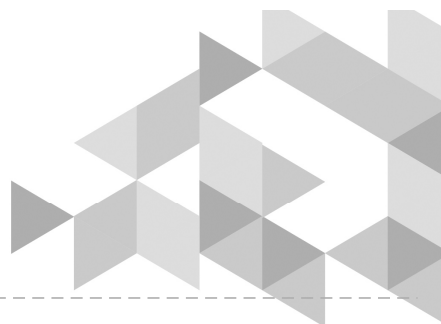
주최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 사회복지특별위원회

CONTENTS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 인사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i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iii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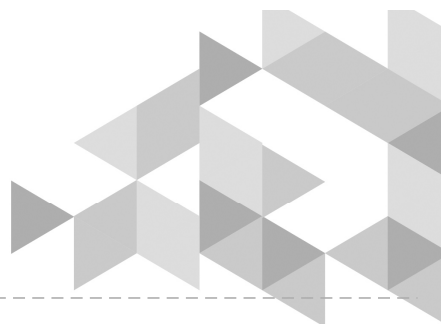
■ 축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vii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ix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xi

■ 패널

1. 돌봄과 기본사회	1
경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2.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본사회의 필수조건입니다	5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	
3. 돌봄·의료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11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	

CONTENTS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 4.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19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5. 장애인과 지역사회통합돌봄 27
조준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
- 6.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정책 수립 방향 제언 39
최수빈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7. 돌봄 의제에 관하여 47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
- 8. 발달장애인과 돌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 55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인사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12.3. 내란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기까지 근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100여 일의 시간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작년 2% 정도로 예측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5% 정도로 낮춰 잡아 저성장이 지속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12.3 내란 이후 우리 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하며 전년보다 10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어 외국인 관광객은 내란 이전보다 15%나 줄었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4,54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기본사회가 필요합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려는 민주적 헌정주의입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원리와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한 계획으로, 기본사회의 확대는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회와 기본적 삶을 보장해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고, 역량을 높여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경제성장전략입니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 없는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 선언입니다. 기본사회가 충실해진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입니다. 돌봄과 의료, 에너지전환, 도시재생 등 그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미뤄둔 문제, 어려워 손대지 못했던 문제를 책임지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사회의 핵심전략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정책적 지원 방안은 어떠한 것이 가능하며 풀어야 할 규제나 정비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첫 주자인 오늘은 그중에서도 돌봄과 의료 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듣습니다. 우리 돌봄과 의료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종사자 처우 악화, 지역과 계층 간 서비스 격차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공공성 확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지역에서, 내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돌봄과 의료는 우리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고 돌보는 국가, 이웃과 함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늘 경청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주민 민주당 기본사회 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서영석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패널자로 나서주신 경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님,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님,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님, 최수빈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은 돌봄과 의료 분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돌봄사회, 돌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돌봄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부디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탄 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민주연구원장 이 한 주

인사말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기본사회포럼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을 모시고, 수석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오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연속 간담회 중 첫 번째 자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뜻깊은 자리에 공동주최이자 좌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돌봄 등은 이러한 기본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경제회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할 돌봄·의료 영역은 기본사회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공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시장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구조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돌봄·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공동체 기반의 의료·돌봄 서비스 등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될 정책과 실천 방안들을 꼼꼼히 듣고, 기본사회로 나아가는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삶이 보장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 주 민**

인사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 주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저출생과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돌봄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의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의료대란이 촉발되면서 국민의 불편 및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의료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기본돌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돌봄을 보장받고, 그 가족과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정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될 사회적경제의 역할 또한 이러한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복지특별위원회도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석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과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문화, 교육, 정보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어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7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민생 위기, 내란의 피해까지,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간다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돌봄과 의료, 재생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에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간담회를 경청하여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축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분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님, 기본사회위원회 박주민 수석부위원장님,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건강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젊은 부모와 어르신들과 관련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의료 서비스 발전은 복지 확대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는 약 120만 개의 일자리와 9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의료 서비스의 개선은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봄·의료 환경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 서비스 제공에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봄과 의료분야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제안되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학계 전문가의 고견이 함께 돌보고 모두 건강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찬 대

축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위기에 처했고, 정부 무책임 속에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고, 홀로 방치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연일 나옵니다.

돌봄과 의료는 국민기본권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권이 보장돼야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지속되고, 양질의 돌봄이 확보돼야 안정적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하는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지역 간 의료·돌봄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의 질 저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돌봄·의료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돌봄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돌봄 경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와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돌봄’ 시스템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합니다.

민주당도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돌봄·의료 기본사회 구현’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패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과 참석하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 성 준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돌봄과 기본사회

경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돌봄과 기본사회

경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1. 인간이 살던 곳에서 죽기를 가장 원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기본**이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기본 사회의 한 축이라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게 돌봄의 기본이 라 생각합니다.
2. 이러한 기본이 잘 지켜지려면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영역 간 협력과 민관 협력이 원활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전문 분야가 협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돌봄 노동 영역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협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협동조합입니다.
3. 민간 영역에서 가장 의료와 돌봄과 복지를 잘 버무리고 있는 곳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없을 때부터 스스로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훌륭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4. 보강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 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의료사협 설립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서 의료사협을 설립하고 통합 돌봄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 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하나도 없는 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다. 통합돌봄으로 예산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예산을 절감만 하지 말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 확장하여야 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기본사회의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5. 안산을 살펴보면

▶ 안산시 통합돌봄 비전과 목표

가. 비전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고도화를 통한 보편적 노인 돌봄 실현

나. 목표

- 온마을 돌봄 안전망 구축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 사례 중심의 포괄적 지원 강화로 지속할 수 있는 의료·돌봄 모델 구축

다. 세부 과제

- 거점형 노인케어 안심주택 확대 및 고도화
- 권역별 돌봄 매니지먼트 강화로 사례 중심의 통합자원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민관 협력기반 재가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강화
- 분산도나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통합적 연계를 통한 노인 중심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안산시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

- ① 건강보험공단 안산시와의 협력관계 구축
- ② 보건소 협력체계 기반 구축
- ③ 방문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④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위한 “안산형 퇴원환자 지원 체계” 구축
- ⑤ 주거에 돌봄과 보건을 더한 “온마을 돌봄 안전망” 구축
- ⑥ AI-IoT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케어 시스템” 구축
- ⑦ 서비스 비용 지불체계 개편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본사회의 필수조건입니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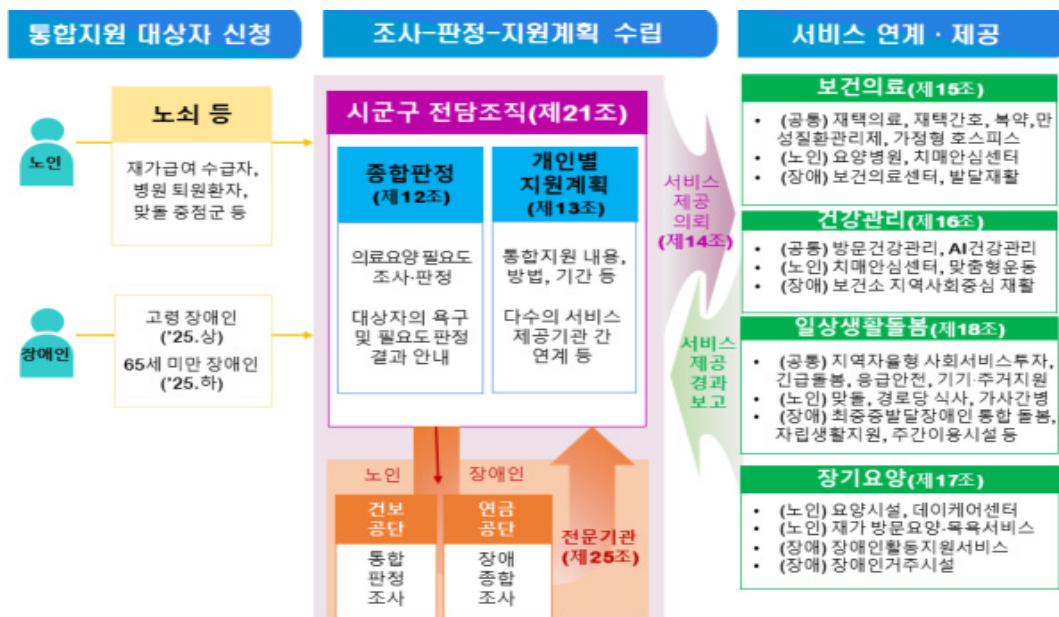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본사회의 필수조건입니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

1. 현 정부는 돌봄통합도 최소한으로 하며, 시장에 맡기려 함

- 1.24일 복지부 통합지원 추진단의 보도자료와 추진방안 자료를 보면 기존 장기요양 관련 시설의 확대, 국토부의 기존 매입임대 물량의 고령자 입주 특화형 활용 등 최소한의 추진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비전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목표	<p>▶ 돌봄 통합지원 모델 전국 확산 및 대상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 실시 지자체 : ['24] 32개 시범사업 → ['26] 모든 시군구 ◦ 통합지원 대상 : ['24] 노인 → ['25] 장애인+ → ['27~] 정신질환자+ <p>▶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의료센터 : ['24] 93개소 → ['27] 250개소 ◦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 ['24] 150개소 → ['27] 1,400개소 ◦ 장애인 건강주치의 : ['24] 1,106명 → ['27] 2,500명



- 통합돌봄을 정립해야 할 전담조직도 시군구 단위로만 설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과 소통해야 할 읍면동 단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 기존 돌봄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통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사회의 사회역량을 전반적으로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만들지 않으면 원래 돌봄통합법을 만들었던 취지는 무색하게 될 것이다.

2.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방향

1) 필요성

-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고령화는 의료비 및 돌봄 관련 비용의 급증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하락,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설 중심 돌봄시스템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어렵다.
- 읍면동 수준의 대면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결합하여 “살고 있던 곳에서 품위있게 늙어갈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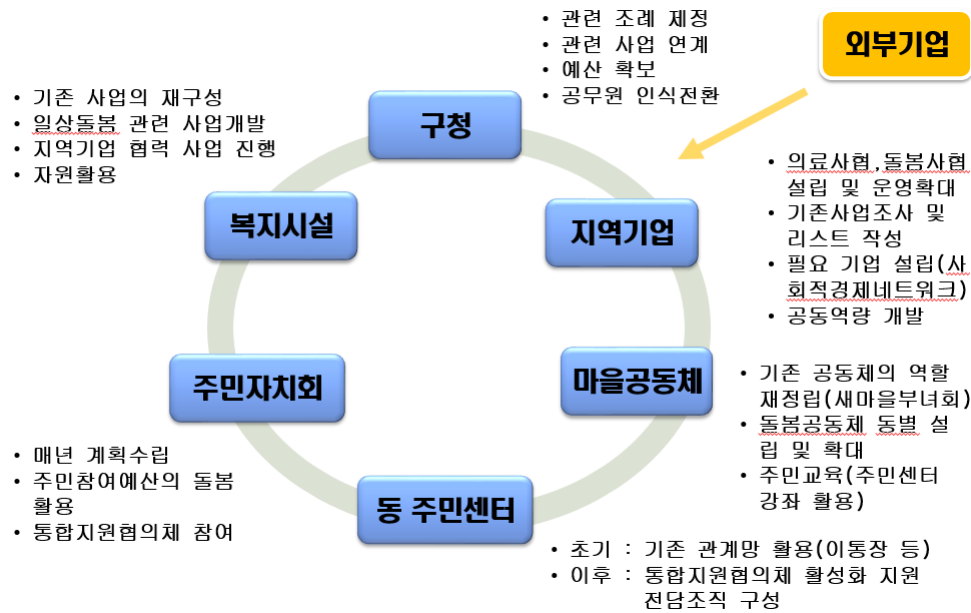
2) 정책과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주체-운영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

□ 제도 정비

- 현재 미흡하게 제정된 돌봄통합법의 개정
 - 고령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 등 추가 포함
 - 일상 돌봄 영역에서 먹거리 돌봄 등 포함
 - 읍면동 통합돌봄센터 의무화 : 당장 모든 읍면동을 만들 수 없다면 연차별 시행을 명시

- 읍면동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시군구 및 읍면동 거버넌스 명시
- 법 개정 전까지 최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를 살린 시행령 등의 수립과 전면적 시범사업 진행
- 통합돌봄 참여 조합원/지역주민에게 노인요양병원과 동일한 의료-요양-재가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이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수가체계 특례 개발



□ 주체 발굴 및 지역주민 자원 최대한 결합

-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도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읍면동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고령자 상호 자원봉사의 제도화,
- 시군단위 지역주민 주도 돌봄 관련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 주민자치법 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확대와 돌봄 활용
-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의지(법에 중앙정부 역할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

□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범사례 연구 및 지원

- 우수사례를 선도하고 있는 의료복지사협, 돌봄사경조직의 연합회 등을 육성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모범 사례를 연구, 정립하고 확산
- 의료복지사협과 돌봄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확산을 위한 양 연합회의 시군구별 조직 개발에 대한 지원(전 정부에서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으나 현 정부에서 사업 폐지)
- 시군단위 주민 주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돌봄사업연합)를 육성하여 지역주민기업 중심의 돌봄공급체계를 구축
 -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체계 확립
 - 지역순환경제 차원 및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함
-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 추진
- 이런 방식은 다른 국정 과제별로 미션 중심의 사회연대경제연합회들에도 적용가능할 것임



광진구(광사넷) 돌봄분과 사업연합 모델



은평구(은돌네) 통합돌봄 모델

□ 농어촌 지역 특화

- 농협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공간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발
 - 농협의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포함
- 현 농촌사회경제 서비스법의 활성화와 통합돌봄법의 결합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돌봄·의료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



돌봄·의료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

1. 들어가며

- 지역사회 통합돌봄, 단기 과업이 아닌 초당적 의제이자 장기적 과제
 - 그간 사회서비스 정책은 ① 사회서비스 확충과 ② 종사자 처우 개선,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
 - 초고령사회 진입 전후로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료 시스템 구축 강조
 - ① 사회서비스 확충·통합
 - ② 서비스 연계
 - ③ 시설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 촉진
 - ④ 종사자 처우개선 (및 품질관리)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이 아니라 시설·병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
 - 급증하는 돌봄수요와 사회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백한 방향성을 지닌 정책으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지속가능성 전제)
 - 이에,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를 놓고 탈시설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돌봄, 치료보다 예방, 집단적 접근보다 소규모 돌봄공동체, 생활권 단위의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주요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다시 대두
 - 단기적 사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장기적 과제인만큼, 성과측정보다는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에 주력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 당부함
 - 본 간담회에 의료, 돌봄, 장애, 노동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이 글은 연구자로서 그 외 강조하고 싶은 바로 내용을 제한함

2. 사회적경제 방식의 돌봄·의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돌봄통합지원법과 사회적경제

-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서 (이미 여러 개정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되짚고 강조할 부분은 제4조 ②항의 3과 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3과 5가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 한계 명확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건의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 교통, 문화, 노동 등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장기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0조 ①항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개선 필요
-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생태계 조성에 관한 구체적 조문 마련 및 관계법령 보완, 돌봄의 공공성에 관한 정부 책임 강화 필요
- 尹정부, “사회보장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2023. 5. 사회보장전략회의)고 주문한 이후, 사서원 기능 전환을 비롯한 각종 시장화 정책 추진(‘민간 주도’명분으로 시장화 촉진)
- ‘소비자 주권’, ‘이용자 선택권 확대’논리가 돌봄의 시장화에 이용.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강조됐던 묵은 논리가 사회서비스 생태계에 시장기업의 진입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
- 기본사회, 돌봄의 시장화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돌봄 시장에 개입해야: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시장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중요
- 커뮤니티케어 실현 과정에서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당사자 조직 등의 참여를 강조한 영국, 일본 등의 선행 사례 주목할 필요 있음
- ⇒ 지역 돌봄의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 등 주민참여조직 및 공동체에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개발과 행정의 권한 부여 필요

- 공공서비스 조달에 있어 비영리조직 및 주민참여조직 우선주의 명시
-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 우선참여권 보장, 커뮤니티 부동산개발권, 커뮤니티 마을계획권, 유희공공토지 활용요청권 등을 지역공동체 권한으로 명시한 영국지역주권법, 사회적가치법 등 참조
- 한편, 지역 통합돌봄은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참여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장기과제, 또한 비영리조직 뿐 아니라 지역의 공기업과 앵커시설, 영리기업들도 관련 정책에 공간과 인력, 자원 등을 제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용적이고도 참여적인 민관협력 기재 마련 필요
-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와 자원이 돌봄의 공공성(公共性)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조달 과정 참여시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 지역주민 참여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구체적 단서 조항 마련해야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민관협력 가능
- ⇒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의 시장화로 치닫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공성 확장 전략 구체화 필요
- 돌봄의 공공성 확장,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 역할 명시
- ex. 매년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의무화, 포상하는 것도 방법

2) '재가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관점과 전략 확장 필요

- 지역 돌봄체계 구축은 '재가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집이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가서비스 뿐 아니라 이동 환경, 일거리,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일상생활 전반의 개선 노력이 있어야: 고독사 예방,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돌봄 가능
-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이나 병원, 시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돌봄, 의료, 주거, 문화, 교육, 이동환경,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도출 가능할 것
- 한편, 사회적경제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을 정책의 대상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으로 설정.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로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상당 수준의 경험을 축적해 옴

- 이러한 관점은 주거,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혁신모델 제시

○ 주거

- 그간의 케어안심주택 모형은 대부분 지원주택의 일부 또는 근거리에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두어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 케어안심주택을 ‘지역사회’ 관점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방식의 케어안심주택**은 단순히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을 돕는 지원주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 돌봄의 거점 공간**으로 세팅 가능
-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인 서봄하우스
 - 주민대표와 지역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유공간, 서비스 시설 이용보다 마을을 산책하고 가꾸는 지역살이, 건강 취미 소모임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함
- 한편, 지역통합돌봄에 있어 케어안심주택 공급과 함께 대표적인 서비스로 주거환경개선사업(소수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적정주거기준 개선 필요: ‘비정상거처 체크리스트’에 거주 환경 포함(현재 방의 수, 면적 등 공간적 부분에 제한)
- 노인특화주택, 장애인특화매입임대주택 등 대상자별 주택지원 방식 제고: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등 주민통합형 지원주택** 공급 필요

○ 의료

- 의료사협을 중심으로 돌봄소모임, 건강리더 육성 등 다양한 사업 전개. 이 중 노원구가 함께걸음의료사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휴센터’ 주목
- 일상적인 건강관리, 소모임 운영, 서로의 비상연락망을 만드는 **지역의 돌봄거점 필요**(주거 정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을 함께하는 돌봄거점 확대)

○ 돌봄

-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위한 **서클 모델 시범사업** 제안
-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과 노인,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수급자) 대상, 생활의 필요와 어려움을 일상공동체를 통해 해결

- 영국 파티서플의 서클 모델, 개인의 자산과 지역사회의 자산을 연계하는 자산기반접근법 등 구체적인 실천 모델과 접근법 존재
- 예컨대, 지원주택의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연계, 자활센터의 담당자는 프로그램 운영 외에 참여주민의 퇴근 후의 삶, 노숙인의 주말 등 접근 한계. 지역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맺기, 자조모임 등 관계와 역량 중심의 접근으로 자기돌봄, 서로돌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사회 거주환경 개선

- ‘무장애마을만들기’ ‘모두를 위한 디자인’ 확대 등 적극적인 지역환경 개선 사업 추진 필요
 - ex) 경사로 설치로 이동약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모두의 1층 프로젝트(KB증권, 서울시, 주요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민관협력)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

3) 각자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돌봄경제 실현

○ 확대되는 돌봄시장 역시 지역순환 구조 달성해야

- 지역 돌봄에 기여할 주민돌봄공동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주민참여형·컨소시엄형(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등을 복원·확대하고 지역공공서비스 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임
 - 주민돌봄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에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법 도출할 것

○ 초고령사회 돌봄 대응, 기후위기 과제 함께 고려해야 “마을돌봄” 가능

-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공적돌봄체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확인, 집단적 접근의 한계 절감, 일상적인 돌봄공동체 조성의 필요성 대두
-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전략 필요한 시점
(주거취약계층, 옥외근로자, 상습수해지역, 노동환경 개선 등 정책대상 확장)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전략은 탄소중립계획, N분 도시 추진계획, 자원순환 도시 조성 등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책과 함께 설계하는 게 바람직(특정 지역 시범사업 추진).

- 이들 사업 모두 주민참여와 민관거버넌스에 기초하여 근거리 연대성을 실현하고 생활권 내 관련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추진 기반이 같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또한 다르지 않음
- 모두 한두 해의 단기적 접근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장기적이고도 단계적 전략이 필요한 사업. 사업의 중복을 막고 주민참여 기제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각 정책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 보충성의 원칙: 복지사회국가의 핵심요소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되는데,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진행되던 행정일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민간복지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민간이 할수 없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리이다. 통합돌봄 시행시 국가는 전담조직 운영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복지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민관협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을 법제화한 독일 경험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포괄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비영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1) 독일 사례

이 하위 단위의 우선권 원칙은 복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적인 사회적 업무실시를 보류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하위 수준의 조직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선권 원칙은 개인의 결정권이 보다 더 우선시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더 낮은 수준에서는 책임자가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와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하고 인도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소규모의 단위의 조직은 스스로의 주도권과 자원활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맡겨져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는 자신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책무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단체도 똑 같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소규모 커뮤니티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향린교회 폰 보제 박사 강연중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민간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를 규율해 온 보충성의 원칙을 법제화한 「청소년복지법」과 「연방사회구호법」의 틀에서 사회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법들이 인사권과 회계, 직장조직 등과 관련해서 디아코니아 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자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디아코니아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갔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들을 통하여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교회와 똑같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특수한 종교적 혹은 세계관적 자기이해에 근거 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인사권 행사, 회계, 직장평의회 구성, 노동조합 정책 등에서 자기이해를 구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권리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가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그들 고유의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복지수혜자가 복지 서비스와 복지기관을 선택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소원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제는 사회국가 독일에서 복지의 다원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2) 일본 사례

일본의 포괄케어센터, 특히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에 약 5,40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들은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종합 상담 및 지원: 노인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한다.
- 재택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노인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방 및 건강 관리: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사회적 참여 지원: 노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 및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의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돌봄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의 포괄케어센터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된다. 주요 운영 주체는 다음과 같다:

(직영: 20% 위탁: 80%)

- 지방자치단체: 시정촌(市町村)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포괄케어센터를 운영한다. 이들은 지역 내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노인 요양 시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의료법인: 의료법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 간호, 개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자원봉사 및 NPO: 자원봉사 단체나 비영리단체(NPO)도 포괄케어센터 운영에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포괄케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결론 및 제언

지금 우리사회에서 통합돌봄은 행정 일방으로 진행하고 마을공동체가 지역돌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참여를 등안시하면 우리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튼튼한 돌봄기반을 구축할수 없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돌봄 대상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돌봄 사각지대 방치), 돌봄에 참여하는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방식으로는 돌봄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행정 중심으로 선별복지를 시행해온 현정부의 복지정책이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돌봄, 의료,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으로 발전시키려면 돌봄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행정 일방의 진행보다는 독일, 일본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하부조직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마을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마을 돌봄에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돌봄의 사각지대를 확인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행정의 해야한다(복지의 민주화). 행정은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보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구매하여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시민들의 돌봄서비스 청구권 보장

지역돌봄에서는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전달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시민들이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돌봄서비스를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돌봄서비스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돌봄 청구 후 30일내 회신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 지역돌봄계획에 시민 참여 보장 지자체는 그 다음해에 시행될 돌봄서비스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돌봄서비스를공모하여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일본과 같이 읍면동에 전담조직을 비영리법인에 의한 위탁을 적극 고려한다(조례에 명시).

3.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 보장 명시

제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와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①에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 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제 20조 통원지원협의체에 주민참여 보장 명시

제 26조 (주민 참여 활성화)

- 주민돌봄 일자리 창출
- 주민돌봄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등의 내용 규정

4. 농촌지역에 의료사협 설립시- 국공립시설로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건지소의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공중보건의 제도는 효용이 다 한듯하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업무를 관장하게 하게 하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주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주민조직에게 과감히 운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40년전에 만들어진 공중보건제도에 더이상 농촌의료를 맡길 수 없는 만큼, 이제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농촌보건의료체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농촌에 설립되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홍성, 산청, 상주등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재택의료센터를 내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입법화된 농촌사회경제서비스법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건강돌봄시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이제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할수 없고, 퇴직의사 혹은 개원의사중 농촌에 거주할 동기를 가진 의사들을 모아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워야 한다. 농촌에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숫가에 가산점을 주어야 농촌에 유인동기를 확보해야 한다.

농촌에 설립된 의료사협이라면 보건지소 시설과 예산을 활용하도록 지원해서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에 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공동체 붕괴를 막기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장애인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조준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



장애인과 지역사회통합돌봄



목 차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
- (2)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 (3)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과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1) 배경

-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OECD국가들에서는 1970-80년대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원, 입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혁 추진
- 시설 및 입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자기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전환시키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관련 정책으로 전환
-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급적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집이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주거서비스·요양·일상생활 지원 등의 제공 체계를 갖춘 지역단위 돌봄안전망 확충**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
→ 보건의료와 복지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2)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진행 현황

커뮤니티케어 → 지역사회통합돌봄 → (지역)돌봄통합지원

- 2018. 1월 문재인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커뮤니티케어' 추진발표
-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
- 2019년. 6월 ~ 2022년 12월까지 16개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 2023년 7월부터 12개 지자체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행
- 2024년 3월 지역단위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추진 방향 제시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제정 →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2020년,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이 결실을 맺게 됨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3) 돌봄통합지원법 요약

- 주 대상: 노인, 장애인
- 내용: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목적: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 추진사항: 19년도 선도사업 시행, 23년 12개 지방 자치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 보안 사항: 시군구 재택의료센터 확충, 복지기관, 의료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지자체와 공단과의 협업, 지자체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주택 보급 등
-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도의 의의: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지자체에 지역돌봄의 전반적인 과정에 책임을 부여하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 노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가올 초고령사회 준비
- '통합지원':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4)과제

- 한국의 돌봄체계의 전반적 서비스 품질 향상
-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충
- 지역의 여러 유관 기관들의 상호 협조 확대
-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기존의 정부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 간의 정보가 교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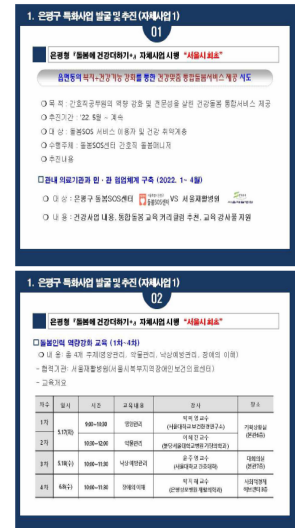
은평에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1) 은평구 복지 현황

- 타 지역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 돌봄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높음
- 민관이 함께 돌봄거버넌스 구축하여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평형 통합돌봄모델 마련해 나가고 있음

(2) 은평구 돌봄 SOS 사업 ('19.7월~)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돌봄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수행
- 사업 목적
 -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의 주도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제도적으로 소외되어온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자 함.
- 사업 내용
 -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
 - 돌봄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 대한 돌봄매니저 개입 진행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50세 이상) 중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해당자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④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생긴 경우
- 서비스 비용: 비용지원 1인 연간 16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담당자: 돌봄매니저)



은평에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3)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함께 만듭니다
<살림통합돌봄>

돌봄에
건강을 더합니다

- 살림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운영
-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한의원, 살림재택의료센터 연계
- 함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가정의학과, 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과전문의, 한의사,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만성질환관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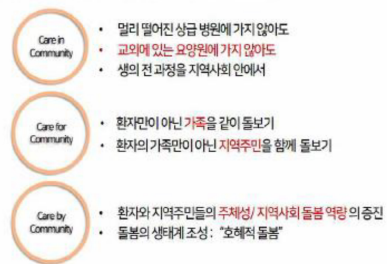
돌봄에
협동을 더합니다

- 건강약자지원사업

☞ 건강약자 지원 신청 안내

마을과 함께
돌봄을 채웁니다

- 건강거점 운영
 - 서로를 돕는 카페: 인지증(치매) 케어가 필요한 분과 보호자가 쉬어가는 곳
 - 건강거점 다짐: 협동으로 우뚝하고 관제로 건강해지는 곳



지역사회 통합돌봄 : 의료와 돌봄의 통합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1)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 Vision: 장애인의 존엄한 삶이 있는 지역사회 통합 실현 (시설의 지역화)

- 장애인이 생활하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2) 추진 배경

- 자선과 시혜의 1세대 복지와 이용시설 중심의 2세대 복지, 그리고 바우처 중심의 3세대 복지를 통합하고, 재구조화
- 보편적 복지시대 시설과 기관 역할 재조정: 기관 이용 클라이언트만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 엔젤스헤이븐 소속 기관 간 협력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문적 서비스와 자원의 통합적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삶의 변화 모색
- 취약계층 돌봄 문제의 보편화, 탈시설화 등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와 고민은 기관 이용인 뿐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확대 필요

3) 목표

- 엔젤스헤이븐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이 있는 지역을 만들기

4) 강점

- (1)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성
- (2) 지역 기반의 다양한 복지 인프라
- (3) 복지서비스 제공 경험과 전문성
- (4) 서비스 운영의 공공성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2)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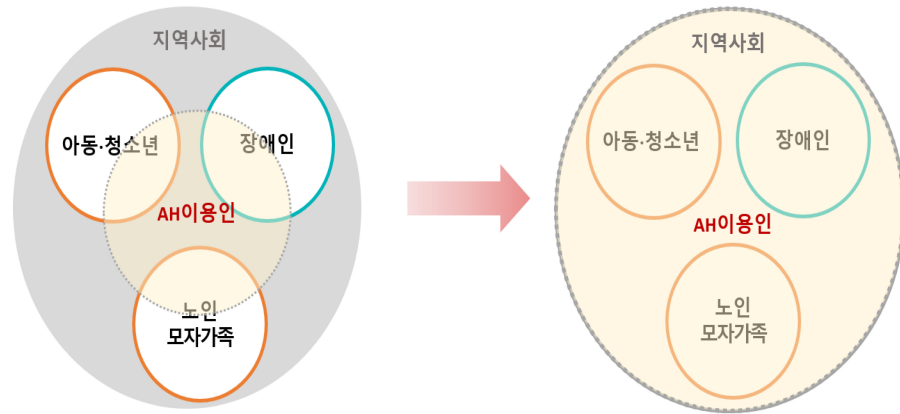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3) 엔젤스헤이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방향

○ 기관 서비스 대상의 확대

【 서비스 대상의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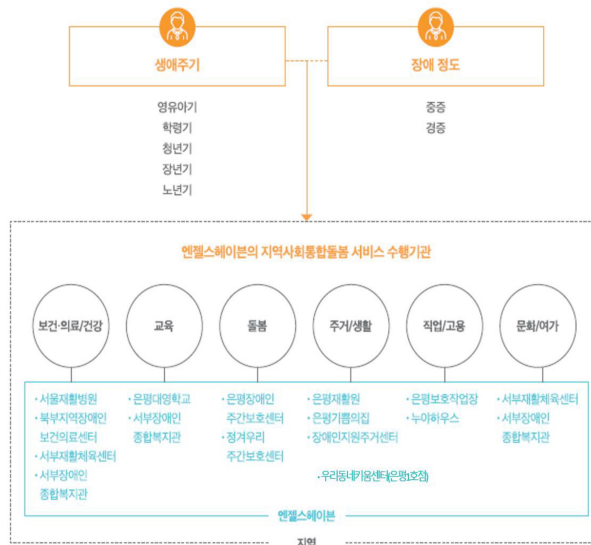
✓ AH기관 이용인만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확대**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4) 엔젤스헤이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방향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전 생애에 걸쳐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5) 기관 간 서비스 연계

○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 대상자의 편리한 이용과 서비스 만족 및 삶의 변화 도모

【 AH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

거주 및 자립 지원	은평천사원 은평재활원 은평기쁨의집 원돌회 AH지원주거센터
보호 / 양육 지원	Ah지역아동복지센터 은평여자청소년일시쉼터 정겨우리주간보호센터 은평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은평키움센터 갈현데이케어센터
돌봄	
재활치료/ 사회복귀	서울재활병원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보건관리	
교육 지원	은평대학교
일자리 지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보호직업장 누아하우스 서부재활체육센터
스포츠 / 건강관리	
문화 / 여가 활동	갈현노인복지관 은평청소년센터 갈현청소년센터 심심
상담 복지	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은평청소년복지센터 꿈드림 은평구진로직업재활지원센터
진로 탐색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6) 엔젤스헤이븐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영역별 구성 기관 및 제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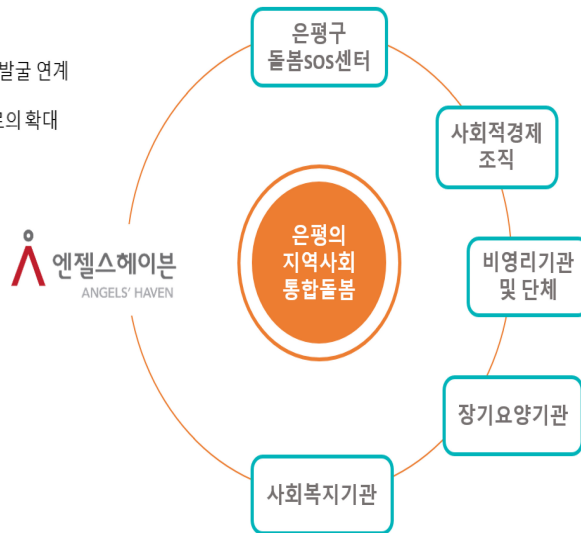
영역	기관	주요 서비스
의료영역	서울재활병원	회복기 재활치료, -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활의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수가 및 성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보호자 없는 통합간호간병서비스, 사회복귀 프로그램, 교육 및 연구 등 수행
보건영역	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과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관련 교육 제공 등
복지영역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 계획과 지원, 장애인의 보행동 확대 및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보행동 지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 문화 여가생활 및 직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
	서부재활체육센터	건강약자들의 재활운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약자들에게 문화적 사회적으로 중남한 참여 기회 제공
	정겨우리 주간보호센터	사람 중심 개별 서비스, 지역사회 활동 중심 취미(여가, 문화체험,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적극적 지원(일상생활, 평생교육, 여가문화, 지역연계, 가족지원 등)
	은평 주간보호센터	사람중심 실천(PCP)에 기반하여 이용자 개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개별화지원, 그룹화 지원 (일상생활, 평생교육, 여가문화, 지역연계, 가족지원 등)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 산책, 건강, 식사, 야간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남성 1실, 여성 1실로 운영, 정원 각 4명)
	24시간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파악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 예정
	역촌2어린이집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보육
	녹번어린이집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보육
	진관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아동 지원 및 부모의 돌봄 부담과 양육스트레스 감소
	비전센터(노원구)	뇌병변장애인의 건강, 장애특성,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지원계획 마련과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가족지원
주거영역	아름드리꿈터(노원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든든한 돌봄 서비스 지원 및 개인예산제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은평재활원	발달장애인(남성) 거주시설 - 코미케어를 통한 집중돌봄시스템 확립, 사람중심계획 실천을 적용한 입주자 개별지원 (by 평행한삶부, 건강한삶부)
	다움장애인복지센터(구 은평기쁨의집)	발달장애아동 거주시설 - 일상생활 및 건강, 지역사회통합지원
	AH지원주거센터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된 삶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총 38세대 지원)
	다다름하우스(주거자립지원팀/서부장학)	독립장애인 거주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영역	은평대학교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직업영역	누아하우스(사회복지법인)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은평보호직업장	직업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 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7)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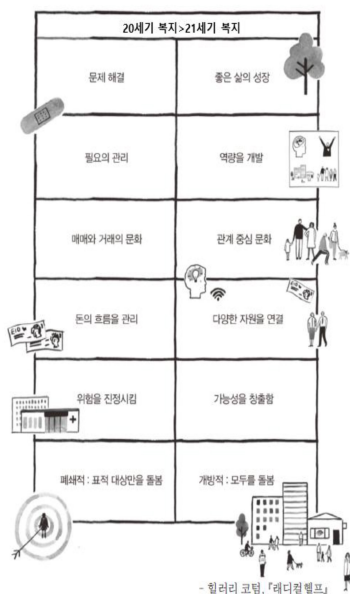
【지역 중심(Community Based)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간 컨소시엄과 민관 거버넌스
- ✓ 지역 정착 성공을 위해 지역 안에서 자원들을 적절하게 발굴 연계
- ✓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지역
- ✓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상으로의 확대



3.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과제

2)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6가지 관점과 실행의 변화



- 통합돌봄에서는 이용자의 경제·사회·문화·정신·신체적 기능이나 변화에 맞춰 이들 서비스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 이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1차 상담창구 및 개인별 라이프(케어)플랜 수립 절차 필요
- 엔젤스헤이븐의 의료, 보건 영역과 복지 영역을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사업을 통합하도록 서로 연계하고 협조하는 체계 구축
 - 법인 내 전담조직 운영, 관련 소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그리고 기관간 분절적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ICT 활용 협업 기반 마련 등은 향후 통합지원체계 구축 시 주요한 핵심
 - 소속기관의 의료, 보건, 복지, 주거, 돌봄 등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서비스 기반 확대 및 기능 재조정 등의 검토
 -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케어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전산화에 기반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관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관련 담당자 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엔젤스헤이븐 및 은평 지역모델 확산



THANK YOU!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정책 수립 방향 제언

최수빈 드림머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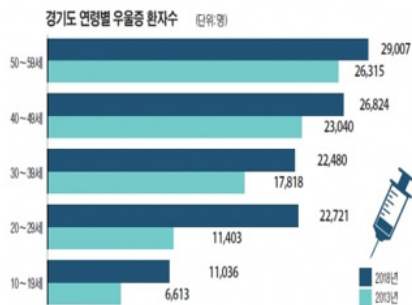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정책 수립 방향 제언

최수빈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서론 : 청년 돌봄,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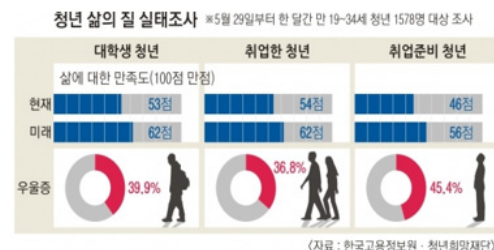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및 출생률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이전에는 없던 도박, 약물, 은둔·고립, 지역소멸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직면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에 청년 당사자로서, 그리고 청년 비영리단체 운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18년 20대 우울증 환자는 22,721명으로, 2013년(11,403명)보다 2배 늘었으며 타 연령층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임.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2018년 경기도 지역 성별·연령별 우울증 환자 수'



청년 문제 해결책으로 많이 제시되는 취업 지원 정책
그러나 취업 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특히 이 중 89%는 스트레스를 경험,
73.2%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자료원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희망재단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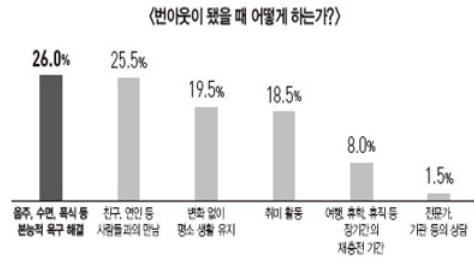
내가 맡은 일이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 있음을 느낀다			일과가 끝났을 때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음을 느낀다			현재 맡은 일이나 학업을 시작한 이후 직무나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20대	30대		20대	30대		20대	30대
매우 그렇다	13.0	15.5	매우 그렇다	17.5	18.5	매우 그렇다	8.5	9.0
그렇다	57.0	50.5	그렇다	54.5	40.5	그렇다	26.5	24.0
보통이다	23.0	24.0	보통이다	18.0	28.5	보통이다	29.0	33.0
그렇지 않다	6.5	9.5	그렇지 않다	10.0	12.5	그렇지 않다	30.0	3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5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6.0	4.0

자료 : 마크로밀 엠브레인

2,30대 번아웃을 느끼는 비율은 65%
특히 청년층 비율이 높은 주임, 대리급 직급 98%, 94%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함.

자료원 : 마크로밀 엠브레인

잘못된대처 '음주, 수면, 폭식'으로 확장



20대의 번아웃 해결방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20대는 번아웃이 됐을 때 번아웃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임시적 방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문제는 약물 오남용(마약), 도박 중독 등 범죄 Case로 확장할 확률이 높음

2. 청년 돌봄에 대한 현재 사회적 변화

최근 청년들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및 지원센터 운영, 청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 신설 등 청년 정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형별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도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청년 돌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 세대 특성

심리학·인문학 기반 자기이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이후 5년간 유관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기존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청년도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아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복지의 사각지대 속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참고사진] 좌: 경희대학교, 청년 멘토 자기이해교육 / 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2023 청년 심리·정서 지원사업 (자사 운영 사업 자료)

저희 단체는 이런 청년들을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기 이해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준이 아닌 ‘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꿈과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청년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배경과 고민을 갖고 있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원인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 정책들은 특정 유형으로 청년을 분류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여러 기관과 협업하며 특정 유형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수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 돌봄 정책을 고민해보았습니다.

4. 정책 제언

○ (제언 1) 청년 유형화로 인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방지

최근 청년 정책에서는 ○○청년으로 명칭을 부여하며 특정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유형화는 정책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숨어 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삶이나 환경이 특정 유형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존재로 비춰지게 되면, 청년 당사자가 낙오감을 느끼거나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바른 인식 개선 없이 단기간에 여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만 접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특정 유형 청년에 대한 편견이 더 강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예시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저마다 은둔 계기나 아픔의 방향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단일한 정책으로 지원한다면,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청년들만 모으는 행위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은 생계비나 긴급 돌봄과 같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청년을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보다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언 2) 금전, 주거, 일자리 중심 단기적 지원 정책의 단계별 접근

현재 청년 정책의 많은 부분이 금전, 주거, 일자리 중심의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의존성을 높이고 탈수급이나 자립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혜 청년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에게는 박탈감을 유발하여 청년 세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일자리 및 자산형성 중심 정책은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의 답은 일자리나 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 후에도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전세 사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자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큰 박탈감과 실패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청년 지원 정책은 반드시 청년들의 자립심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청년 정책을 수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 추진
 - (일자리) 일경험활성화,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 (주거) 청년 중심 공공분양 확대 등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교육)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복지)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터운 복지 실현
 - (공정 기회)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
 - (참여 보장)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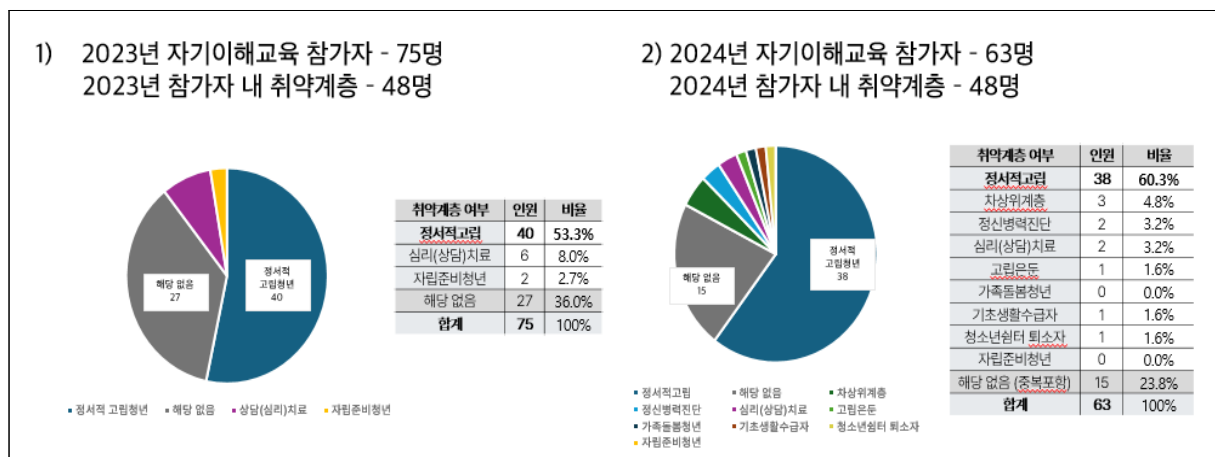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2.10.25.)

5. 결론: 근본적·예방적 청년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돌봄 생태계 구축

현재 청년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교, 박탈, 낙오감을 더욱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심리적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이나 제도도 개인이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근본적 청년 정책 접근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이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우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기이해 교육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 세대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 조직은 2020년부터 약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교육’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며 다 함께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왜 그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가’는 우리 사회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2023, 2024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 내 참여자 취약계층 현황 (운영 대표기관 : 드림머스 사회적협동조합)

〈참여청년 주요 변화 사례〉

- ① 심리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서적고립 및 심리상담을 병행하던 참가자 사례. 자기이해 중심의 교육 참여 이후 안정감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경험했으며, 심리상담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직접 보고함.
- ② 높은 인정욕구로 인한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참가자 사례. 객관적 검사 지표를 통한 자기 이해와 강점 중심의 교육이 취업 준비 등 실질적 진로 설정에 기여하였으며, 자기인식의 균형성 회복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보고함.
- ③ 장기적인 고시 준비로 인해 번아웃 및 우울감 증상을 보이던 참가자 사례. 교육 내에서 관계 맺기의 경험을 통해 자기 기준과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함.

최종적으로 이런 자생력과 지지체계를 갖춘 청년에게 금전, 주거, 일자리와 같은 단기적 지원 정책이 함께 수반된다면 훨씬 높은 정책적 효용성과 효능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청년기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처음 걸어보는 길에 대한 혼란을 겪는 시기이면서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의 수 많은 갈래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기성세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체력을 키워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이자 예방적 차원의 청년 정책들이 중앙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청년 부서에서도 모든 청년 정책의 선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마무리하며

학교와 기업이 말하는 인재상은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의식을 갖추고, 자신의 가치관을 소신 있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직장에서만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소통과 협력,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은 점점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 가치가 홀대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취업 양성소로 변질되었다는 우려가 나온 지도 오래되었으며, 오늘날 청년 세대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은 그 우려의 결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 우울증 증가, 높은 자살률 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정량결과나 단기적인 변화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돌봄 의제에 관하여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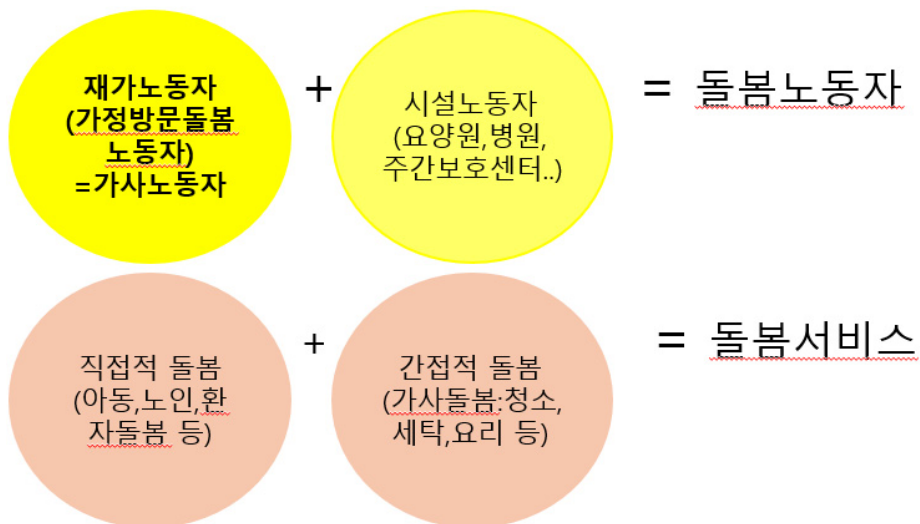


돌봄 의제에 관하여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

1. 현황

1) 돌봄서비스의 기본 개념



2)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주요 산업으로 성장 중

- 한국의 산업별 종사자 규모(통계청, 2023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 도소매업에 이어 보건·사회복지업이 3위, 4위는 음식숙박업
* 사업체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은 편임
- ILO와 UN은 돌봄서비스의 중요성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은 23년에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지정. 돌봄은 전 세계의 일자리 중 3억 8100만 개의 일자리, 전체 고용의 약 11.5%를 차지. 돌봄 노동은 대부분 가정이나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제공되며, 이는 매년 세계 경제에 약 11조 달러를 기여. 무급 돌봄 노동의 4분의 3 이상(약 6억 6천 6백만 명), 유급 돌봄 노동력의 3분의

2가 여성 노동자이므로 이 이슈는 양성평등과 밀접하다고 명시

- ILO : 24년 ‘돌봄경제’를 일반토론의 의제로 정해 다루었음. ‘돌봄경제에 관한 일반토론(care economy general discussion)’이 진행되었고 노사정은 돌봄경제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합의함. ①돌봄(care work)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그리고 비영리 및 영리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②공식, 비공식 영역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③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함

3) 관련 법제도

구분	인원	주요 근거법률	노동형태/노동법 적용
요양보호사	60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간제 호출형 노동 노동법 적용(휴게시간 등 일부 비현실적)
가사서비스노동자 (가사/아이돌봄)	20만(추정)	직업안정법 (비공식부문)	시간제 호출형 노동 노동법, 사회보험법 전면 미적용
간병인	12만(추정)	직업안정법 (비공식부문)	장시간 시설입주 노동 급성기병원, 요양원 일부 노동법 미적용
장애인활동지원사	11만명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간제 호출형 노동 노동법 적용(휴게시간 등 일부 비현실적)
노인생활지원사	2.9만명	노인복지법	고정된 파트타임 노동/노동법 적용
아이돌보미 (여가부)	2.3만명	아이돌봄지원법	시간제 호출형노동/노동법 적용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1.8만명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건수에 따른 비정규 노동/노동법 적용
계	110만명		

법안명	경과	특징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4년 2월 제정. 26년 시행	정부 중심의 전달체계에 방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년 발의	공공부문 돌봄노동자 중심

→ 담당부처가 다르고, 법률은 주로 ‘이용자 복지’ ‘공급기관(대부분 등록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산업별 사업체수 〉

(단위: 개, %, %p)

산 업 분 류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체	6,139,899	100.0	6,238,580	100.0	98,681	-	1.6
A. 농림어업	13,102	0.2	12,349	0.2	-753	0.0	-5.7
B. 광업	1,936	0.0	1,846	0.0	-90	0.0	-4.6
C. 제조업	586,532	9.6	532,325	8.5	-54,207	-1.0	-9.2
D. 전기·가스·증기업	91,286	1.5	109,841	1.8	18,555	0.3	20.3
E. 수도·하수·폐기업	13,756	0.2	13,559	0.2	-197	0.0	-1.4
F. 건설업	494,228	8.0	495,725	7.9	1,497	-0.1	0.3
G. 도·소매업	1,519,505	24.7	1,572,296	25.2	52,791	0.5	3.5
H. 운수업	644,407	10.5	668,999	10.7	24,592	0.2	3.8
I. 숙박·음식점업	858,593	14.0	861,863	13.8	3,270	-0.2	0.4
J. 정보통신업	127,974	2.1	128,222	2.1	248	0.0	0.2
K. 금융·보험업	65,050	1.1	65,635	1.1	585	0.0	0.9
L. 부동산업	290,074	4.7	291,190	4.7	1,116	-0.1	0.4
M. 전문·과학·기술업	226,570	3.7	231,258	3.7	4,688	0.0	2.1
N. 사업시설·지원업	138,183	2.3	138,978	2.2	795	0.0	0.6
O. 공공행정	12,642	0.2	12,610	0.2	-32	0.0	-0.3
P. 교육서비스업	256,060	4.2	271,402	4.4	15,342	0.2	6.0
Q. 보건·사회복지업	167,062	2.7	167,733	2.7	671	0.0	0.4
R. 예술·스포츠·여가업	144,915	2.4	148,024	2.4	3,109	0.0	2.1
S. 협회·기타서비스업	488,024	7.9	514,725	8.3	26,701	0.3	5.5

〈 산업별 종사자수 〉

(단위: 명, %, %p)

산 업 분 류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 체	25,217,123	100.0	25,321,526	100.0	104,403	-	0.4
A. 농림어업	66,605	0.3	64,889	0.3	-1,716	0.0	-2.6
B. 광업	14,442	0.1	14,332	0.1	-110	0.0	-0.8
C. 제조업	4,253,904	16.9	4,216,018	16.6	-37,886	-0.2	-0.9
D. 전기·가스·증기업	160,666	0.6	175,780	0.7	15,114	0.1	9.4
E. 수도·하수·폐기업	134,281	0.5	131,113	0.5	-3,168	0.0	-2.4
F. 건설업	1,955,608	7.8	1,920,591	7.6	-35,017	-0.2	-1.8
G. 도·소매업	3,577,370	14.2	3,542,875	14.0	-34,495	-0.2	-1.0
H. 운수업	1,383,516	5.5	1,404,820	5.5	21,304	0.1	1.5
I. 숙박·음식점업	2,215,219	8.8	2,293,381	9.1	78,162	0.3	3.5
J. 정보통신업	872,905	3.5	861,539	3.4	-11,366	-0.1	-1.3
K. 금융·보험업	731,176	2.9	731,021	2.9	-155	0.0	0.0
L. 부동산업	692,012	2.7	671,232	2.7	-20,780	-0.1	-3.0
M. 전문·과학·기술업	1,436,785	5.7	1,461,827	5.8	25,042	0.1	1.7
N. 사업시설·지원업	1,300,103	5.2	1,306,471	5.2	6,368	0.0	0.5
O. 공공행정	888,959	3.5	898,268	3.5	9,309	0.0	1.0
P. 교육서비스업	1,723,109	6.8	1,713,952	6.8	-9,157	-0.1	-0.5
Q. 보건·사회복지업	2,457,512	9.7	2,539,015	10.0	81,503	0.3	3.3
R. 예술·스포츠·여가업	444,340	1.8	450,233	1.8	5,893	0.0	1.3
S. 협회·기타서비스업	908,611	3.6	924,169	3.6	15,558	0.0	1.7

2. 이슈

- 1) 늘어나는 돌봄 수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려면 어떻게?
- 2) 늘어나는 돌봄노동자, 안정고용과 노동권 보장은 어떻게?
- 3)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인력 수급은 어떻게?
- 4)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급기관은 어떻게?

3. 22년 대선공약

제출 (공동요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민돌봄기본권 도입과 돌봄기본법 제정 2. 지원센터 설립, 정부 사업 위탁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돌봄의 주요 주체로 육성 3. 현행 돌봄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체계 개편 4. 돌봄 사회적경제 공공플랫폼의 도입을 통한 돌봄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최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 2.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현황(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 돌봄 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역할 필요 - 지역사회 생활권 단위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과 민간중심 돌봄영역의 공공성 확보 필요 <input type="checkbox"/> 공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돌봄공동체 조성 및 생활권 단위 돌봄거점센터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돌봄기관이 아닌 지역의 돌봄거점센터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돌봄네트워크 등과 연계 ②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인 돌봄 제공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다양한 특화서비스 제공 (마음돌봄 등) ③ 5대 돌봄 영역(어르신, 간호·간병, 장애인, 초등생, 영유아)의 돌봄자원과 수요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④ 민간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좋은 돌봄 제공을 위한 돌봄기관 인증제 및 자격제도 운영 ⑤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케어팜 서비스 확대와 케어타운 조성 지원

4. 공약의제

1) 돌봄기본법 제정과 전국민 돌봄기본권 보장

-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부처간 협업과 주관부처의 명시
- 이용자, 종사자, 공급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

*** 사회서비스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협동조합의 공공성, 차별성은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따라서 전체 법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필요가 있음

[2022년 대선공약 요구안의 설명문]

- 이제 돌봄은 전국민, 그리고 전생애주기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국가의 공적 책무로 자리잡고 있음. 나아가 종사자 수는 이미 100만을 넘었으며 향후에도 고령화, 맞벌이가구의 증가, 청년세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배경으로 증가할 주요 산업군임
- 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 가사돌봄을 공통분모로 하여 대인돌봄으로 확장되는 균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 종사자-소비자-기업들의 상호 이해가 품질 향상의 키워드라는 공통점을 가짐. 따라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영역임
- 하지만 현재 돌봄서비스는 각 부처와 사업 단위로 쪼개져서 산업으로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범위·공급체계의 규모 등에서 지역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적경제주체들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전국민돌봄기본권 도입과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래의 전략적 산업군으로 배치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공동의 직업훈련시스템과 수가제도 정비,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통합적 실태조사와 통계 산출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현행 돌봄서비스의 적극 확대 및 신규 시행

- 산모신생아돌봄, **아이돌봄**의 적극 확대
- 정신장애인 돌봄서비스, 급성기 **간병서비스** 등 신규 시행
- **가사돌봄**서비스의 전국적 시행(2020 사회적경제 6대 시그니처사업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22년 신(新)사회서비스로 시범사업 진행되다가 중단. 지방정부에서 확대 중)
- ☞ 생애주기별(임신-출산-양육-간병/장애-고령-장례) / 공간별(가정내·시설)로 구체화 필요
- * 한국노총에서도 정리 중

[2022년 대선공약 요구안의 설명문]

- 또한 정부의 사업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의 돌봄 사회적경제조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 ▶ 노인일자리사업, 청년뉴딜사업 등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경제의 진입 촉진
 - ▶ 돌봄-건강관리-장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신(新)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 ▶ 일가정양립, 한부모·미혼모·보호종료아동 등을 위한 가사돌봄바우처의 도입

3) 돌봄공공플랫폼의 구축

-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간 협업의 중요성과 진행과정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제외함

5. 기타

- 공공부문에 안주하고 있는 돌봄협동조합
- 돌봄협동조합은 지역의 공생, 지역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가
- 돌봄협동조합은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 기본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발달장애인과 돌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발달장애인과 돌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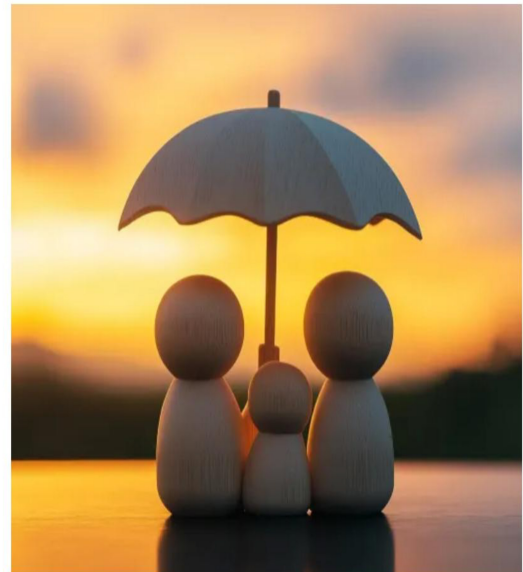
발달장애지원이공협동조합연합회 임신화

서론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 및 기본사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발달장애인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1

돌봄 서비스의 부족 및 지역 간 격차

현재 국내 돌봄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에서는 돌봄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

2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로 인한 부담 증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주로 부모나 형제가 담당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돌봄 제공자의 소진(Burnout)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돌봄자의 비율이 높아 성별 불평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3

돌봄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돌봄 기관 및 시설이 부족하며,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의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 돌봄 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재정적 한계로 인한 서비스 지속 가능성 부족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민간 기관의 돌봄 서비스는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론

사회적경제와 기본사회 관점에서의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

돌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 협동조합을 활용하면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 자금 지원 없이도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기본사회 개념을 적용한 공공-민간 협력 돌봄 체계 구축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커뮤니티 형성 및 자조모임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돌봄 제공자 및 이용자가 함께 자조모임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같은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본론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모델 개발 필요성

한국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혼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공공 돌봄 시스템 분석

스웨덴은 국가가 돌봄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돌봄보험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돌봄 사례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한 포괄적 돌봄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본론

정책적 제안

1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역별
균형 배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기관을 확충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 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2

돌봄 제공자 지원 강화

돌봄 제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 복지 혜택 확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한 돌봄 사업 확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돌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 및 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

정부는 돌봄 서비스 예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 관련 기금을 신설하거나 돌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발달장애인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기본사회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질의응답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돌봄·의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

주최



민주연구원 ·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 사회복지특별위원회